

#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7대 악법 저지 및 언론노조 파업 지지 기자회견



그림 2 > 한겨레신문 장봉군 화백

- 일시 : 2008년 12월29일(월) 오전 10시30분
- 장소 : 한나라당 대구시당사 앞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709-822 대구시 남구 대명3동 2296-20번지 /전화 : 053-628-2591 · 홈페이지 : [www.dgngo.org](http://www.dgngo.org)

공동대표 김사열 · 박지극 · 박명애 · 최병진

강북사랑시민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구민예총,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KYC, 도시공동체,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 주부모임(이상 26개 단체)

#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7대 악법 저지 및 언론노조 파업 지지 기자회견

## □ 목차

- 사회 -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인사 - 김사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투쟁방향 - 허미옥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그림 5 > 프레스시안 손문상 화백

#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7대 악법 Q&A

## □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따른 각 당의 입장

법안	현행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신문법	1위 사업자 시장점유율 30%, 3개 이하 사업자의 합이 60% 이상 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위헌조항이므로 삭제	삭제 반대, 위헌 취지에 맞게 비율 상향 조정	개정 검토
	일간신문 지배주주의 신문 복수소유 일률 금지	헌법 불합치이므로 삭제	현재 판결 취지에 맞게 허용 또는 규정 완화	개정검토
	신문, 방송 겸영 금지 조항	규제 폐지	폐지 절대 반대	단계적 허용
	인터넷 포털 관련 규정 없음	인터넷뉴스 서비스 별도 분류해 준수사항 규정	신문법 관련 조항 삽입 반대. 언론중재법에서 논의 가능	미확정
언론중재법	인터넷포털은 중재대상 아님.	인터넷포털, 언론사 닷컴, IPTV 추가	논의 가능	인터넷포털, 언론사 닷 컴, IPTV 추 가
방송법	대기업·신문·통신의 지상파, 중 합편성·보도PP 소유 금지	지상파는 20%, 종합편성·보도PP는 49%까지 허용	신문 방송 겸영 및 지 분소유 절대 반대	단계적 허용
	재허가 기간 (5년 범위 내)	7년 범위 내	검토 중	5년 범위 내
IPTV법	대기업·신문·통신의 종합편성·보도 PP 소유 금지	49%까지 허용	절대 반대	방송법과 연 계해 신중 접근
DTV 전환 특별 법	신설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게 디지털방송국 구 축 의무 부여	강제 규정화 반대	미확정
정보 통신 망법	-	사이버모욕죄 도입 (반의사불법죄)	절대 반대	반대
전파 법	무선국 개설허용 유효기간 연장			

## □ '언론 장악 7대 악법 저지' 쟁점 및 투쟁 방향

- 포인트 : “신문과 재벌기업의 방송진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규제 완화”
- 언론노조 : “보수 언론 여론독점, 민주주의 후퇴”
- 시민사회 : “법 제 개정 절차적 과정 무시, 역사 거스르는 미디어정책”

### <1> 여론독점 심화

- 한국사회 여론독점 심화
  - : 여론 - 언론시장 70%를 차지하는 보수언론(조중동) vs 개혁언론 (방송, 인터넷)
  - : 비판적 사회담론을 담아내는 것으로 여론의 균형을 맞추어 왔던 것.
  - : 한나라당 법안은 여론 한 축인 '방송과 인터넷'을 '보수여론'으로 편입 의도
  - : 현 정권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보수적 여론만 남기려는 계획
  - 결국 한국사회 언론자유 약화, 권력 및 자본 비판 死, 민주주의 후퇴
- 정책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미디어의 △ 공공성 △ 지역성 △ 다양성 훼손

### <2> 절차적 과정 무시

- 12월 3일, 개혁입법이라는 이름아래, 7대 언론법 상정.
- 한나라당 수적 우위 속에 상임위 상정 예정, 민주당은 접거 농성.
- 한나라당 강행 처리, 민주당은 결사반대
- “보수 언론 여론독점, 민주주의 후퇴”, 언론노조가 파업에 돌입
- “법 제·개정 절차적 과정 무시, 역사 거스르는 미디어정책”

### <3> 한나라당 강행 처리 이유

- 1997·2002년 대선, 04년 탄핵, 08년 촛불 정국 통해 '방송, 인터넷 규제'고려
- 올 초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MB특보사장단 임명 시작
- 정권 연장 및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언론 시스템 마련

### <4> 시민사회 주장

- 언론관련 법안은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주요한 근간
- 특정정권(정치색)에 따라 임의대로 끼워 맞추는 것은 문제
- 여야 + 제 세력간에 논의, 세계적 흐름과 한국적 상황에 맞는 미디어정책 고민

#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7대 악법 저지 및 언론노조 파업 지지 기자회견문

“미디어 재벌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됐지만  
정작 시민들과 민주주의는 가난해졌다”

미디어재벌의 횡포와 여론왜곡으로 사회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 이탈리아 등 해외 시민사회가 한국사회에 던지는 주요한 메시지다.

지난 3일, 한나라당은 당내에서도 검토되지 않은 ‘미디어관련 7대 법’을 제안하고, 아무런 논의도 없이 연내에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당 법은 △ 보수언론의 방송진출을 허용, 지역언론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신문법 △ 대기업의 방송진출 규제를 완화, 재벌방송을 만들겠다는 방송법, IP법, △ ‘사이버 모욕죄’등으로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정보통신방법’ △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 국가기관에서 규제하며, 지상파 방송을 민영화를 수월케 하는 언론중재법, 전파법, DTV특별법 등이다.

즉 ‘신문과 재벌기업의 방송진출,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통해 ‘정권유지 및 재창출을 위한 여론독점’을 피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논리는 한국사회 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국민 대다수는 한나라당 미디어 관련 법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한국기자협회·한국PD협회·미디어오늘에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 신문의 지상파·방송뉴스 진출에 ... 반대 63.1% △ 대기업의 지상파·방송뉴스 진출에 ...반대 62.4%라고 응답했다.

‘반대 이유’로 △ ‘비판 기능이 사라지고 뉴스의 공정성이 약해진다 ... 61.1% △ 서민보다 재벌과 기득권 층을 위한 뉴스가 많아진다 ... 20.8% 등이다.

하지만 이런 민심을 뒤로한 채, 1% 재벌을 위한 정책만 펴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언론노조는 26일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

또한 제작 현장을 뒤로 한 채 차가운 겨울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언론노조 조합원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

미디어는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촉진해왔던 주요한 디딤돌이었다.  
한국사회주요 근간을 형성할 수 있는 미디어관련법은 특정정권의 색깔에 따라 이리 저리 짜맞춰져서는 안된다.

여론다양성과 지역성, 공공성을 훼손하는 한나라당 미디어 7대 악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여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함께 만나 폭넓은 논의를 통해 세계적 흐름과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미디어정책을 합의해야 한다.

- MB氏, MBC를 '강부자'에게로?... 절대 안돼!!
- 지역성, 공공성 훼손하는 한나라당 미디어 악법 반대한다!!
- 한나라당 미디어7대 악법.. 강행 처리 반대한다!!
- 여론독점·재벌언론 양산하는 한나라당 미디어 악법 반대한다!!

2008년 12월29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